

코로나19 새 풍속...주말·휴일에도 조용한 선거운동

운동 동원 광장유세 사라져
유세차 음악도 최대한 낮게
군소 후보 얼굴알리기 제약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첫 주말과 휴일을 맞은 각 후보들은 초반 민심 선점을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우려해 대규모 유세보다는 시장과 공원 등 인파가 많은 지역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입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광장 유세 대신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고 TV토론과 SNS로 공약을 알리는 등 예전과 달리 선거운동 모습이 확 바뀌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엽서와 스피커를 가득 실은 트럭으로 홍보 영상과 노래를 틀며 운동네가 떠들썩하게 하던 선거운동은 거의 사라진 것이다. 대신 각 후보들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조용한 선거운동 방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과 인지도를 가진 후보들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지지율이 낮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5일 광주 동구남구를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성환 후보가 남광주역 광장에 유세 차량을 세워놓고 운동 대신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왼쪽) 광주 광산갑에 출마한 정의당 나경채 후보가 자전거를 탄 채 승승5일장 일대를 돌고 있다. (사진=각 후보 캠프 제공)



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조용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 후보들은 선거구호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돌아다니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과도한 홍보 영상이나 로고송을 틀고, 운동원들이 춤을 추며 후보를 알리는 것도 자제하는 모습이며, 일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한다며 방역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방역 봉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추격하는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조용한 선거운동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란한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얼굴 알리기가 더욱 절실한 입장이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정당) 득표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당을 알려야 할 군소 정당은 더욱 더 힘든 상황이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통합한 민생당의 경우 정작 유권자들이 현역 의원인 후보자들은 알고 있으나 소속 정당은 알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낸 국민의당 역시 유권자들 사이에서 안철수 대표는 알지만 당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의당과 민중당도 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만들면서 정당 투표에서도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다.

이들은 유권자와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신 유세차를 타고 거리를 돌며 자신을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과 로고송을 틀고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처리되는 선거인 만큼 대규모 유세를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대신 유권자의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군소 정당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송 토론회 참여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아우성이다.

공직선거법 상 토론회 참석 자격은 △5인 이상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소속 후보 △여론조사에서 평균 5%를 넘는 후보 등 예외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김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4·15총선 공동 공약' 발표

적정 임대수수료 책정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위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공동 공약발표 캠페인에서 "대한민국 '을' 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한다"고 약속했다.

두 당은 복합소평몰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소평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별로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중소기업의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공약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을' 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법과 제도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시민당은 "특별법을 통해 700만 이상 되는 소상공인이 먹고사는 산업이 육성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4·15총선 광주 선거인 수 120만7천972명

만18세 유권자 1만8천여명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8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광주지역의 전체 선거인 수는 명부 확정일(4월 3일) 기준 120만7천972명으로 확인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4·15총선 선거인 수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115만8천221명)보다 4만9천751명(4.3%) 늘었다. 선거인은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70대 이상 13만5천852명(11.25%), 60대 15만6천450명

(12.95%), 50대 23만3천949명(19.37%), 40대 24만4천73명(20.21%), 30대 19만194명(15.74%), 20대 20만8천127명(17.23%), 10대 3만9천327명(3.26%) 등이다.

만 18세 선거인은 전체의 1.52%인 1만8천342명이며 이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5천622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59만2천78명(49%), 여자가 61만5천864명(51%)으로 여성 유권자가 2만3천816명 많았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15일 선거일에 투표하거나 10~11일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최영범 기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사전투표 4월 10일(금)~11일(토)
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권 연령 :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모두 함께 지켜요!

- 신분증 준비하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발열체크 받고 손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